

# 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與 "무관용 3법" 野 "정부 책임"

### 민주당 "형량 2배...학대 방지 당정협의 추진"

### 국민의힘 "경찰 안일한 태도...책임 물어야"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에 동참하며 법·제도 개선, 가해자 및 책임자 엄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은 징역 4~10년이다.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을 최고 1.5배까지 '특별 조정'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노용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겠다"며 "16개월 정인이의 가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국민생명 무관용 3법'을 제정하겠다"며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정치권이 실질적인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아동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 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당정청 원팀의 정신으로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법,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동학대

방지운동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리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인 김미애 비대위원도 "아동학대 사건은 그때만 잠깐 관심을 받고 무수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정인이를 둘러싼 국가보호체계가 왜 그렇게 무심히 작동했다. 우리는 제도만 믿고 사회적 방임하고 있지 않겠나"라며 "양부모에겐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분류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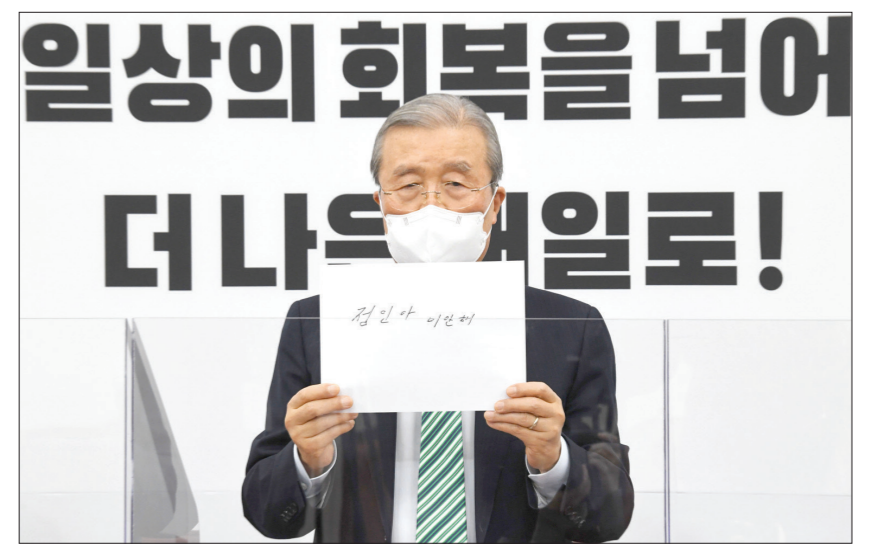
김현아 비대위원은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잘못도 크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 방조한 경찰의 책임도 크다"며 "박원순 성범죄 관련에서도 6개

월간 46명의 경찰관 투입했음에도 내사종결해 면죄부를 줬고 이요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사건도 경찰이 합의를 써줘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정부여당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하지 않나"라며 "향후 국회는 이와 관련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가방에 갇힌 어머니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천안 소년에 이어 고속 승고위하는 정인이를 살리기 위해 구조 신호가 울렸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신호를 묵살했다"며 "유엔에 부총리께 먼저 책임을 묻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2번째 책임을 묻는다. 정인이를 살릴 소중한 기회를 처참히 무너뜨린 해당 경찰서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저 작은 생명을 살려달라는 신호가 번번이 외면받은 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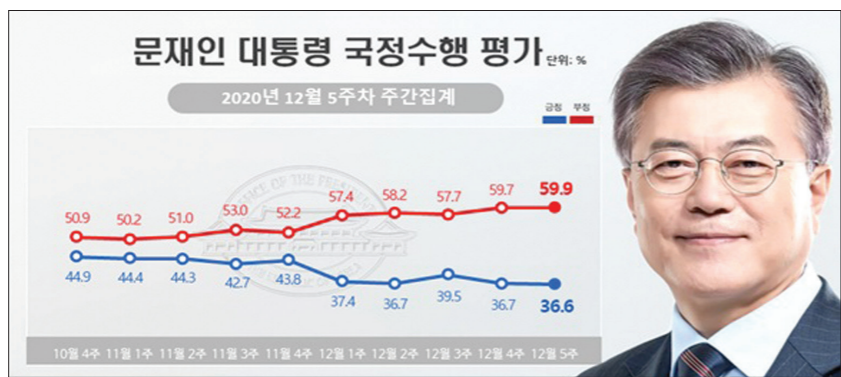
안 대표는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 관련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다"

며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연숙 의원은 "3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안전망이라면 이제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학대피해아동에게 응급실과도 같은 쉼터는 최소한 전국 시군구에 쉼터 1개소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文대통령 지지율 36.6%...부정평가 60% 육박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30%대를 이어갔다.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지난해 12월5주차(28일~31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

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내린 36.6%(매우 잘함 22.4%, 잘하는 편 14.2%)로 조사됐다(4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오른 59.9%(매우 잘못함 45.2%, 잘못하는 편 1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전주와 같은 3.6%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전주 저점을 경신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율은 전 고점을 경신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보였다. 긍정·부정 평가율 차이는 23.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결과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900명에 육박하는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진 것 등이 부정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특히 추 장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 논란이 진보층(8.1%p ↓, 69.2%→61.1%, 부정평가 35.7%) 지지 하락에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스

## 'MB·朴 사면론' 속도조절 들어간 與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당사자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정리하며 속도조절에 들어갔으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당내 반대 기류를 확인했음에도 "반복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밝히며 소신과 의지를 거듭 확인한 상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일단 '당사자 반성'과 '국민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함께하면서 갈등의 확산은 일단 막았으나 '사면론'에 대한 반대 기류는 여전히

모습이다.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사면론에 대해 일일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최고위원 간담회 종료 후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공개적인 반대 의견 표명이 없지는 않았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검찰총장 탄핵,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리였을 때 가능한 일

이다.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대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김성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현 정권의 정치탄압 때문에 구속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정치탄압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격정은 '진실없는 화해는 통합이 아닌 더 큰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며 "이낙연 대표도 위 두 가지 역사적 사례를 충분히 아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